

‘포스트 해임안’ 정국 급랭...여야, 예산안 협상 평행선

시한D-3,오전 공개협상없이 여론전 “예산 뒷전” vs “국민 감세” 與 ‘국조 보이콧’·野 ‘서민 감세’ 변수...법인세 등 쟁점 여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을 사흘 앞둔 12일에도 팽팽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오는 15일을 테드라인으로 설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날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이후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여야 협상의 여지는 더 좁아진 형국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서민감세안’ 추가 검토에 나서는 등 기존 쟁점에 더해 전선은 더 넓어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 지도부 간 회동 등 공개 협상 없이 여론전에 열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반박하는 한편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정쟁화하면서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

감세, 초부자감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혁 비대위원은 부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예산안을 불모로 국정조사를 하려고 생떼를 쓰고, 국정조사를 수용하거나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관부터 해임안 하려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예산안은 뒷전”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2조원 안팎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국민 감세’라고 명명하고 본회의에서 독자적으로 강행 표결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랐던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며 “초부자감세를 막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하더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초

부자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며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비롯한 기존의 10여개 쟁점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관련

접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접점이 쉽지 않다”며 “서로가 더 양보할 것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 모두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이 큰 만큼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거듭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표 서민 감세안’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이른바 ‘부자 감세안’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서민 감세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며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서민에 대한 감세도 진행하면서 협상 출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장이 15일에는 어떤 예산안이라도 표결 처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김 의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경중호 경제부총리 등에게 우리가 마련한 수정안 초안을 다 전달했다”며 “저쪽에서도 다 검토했다. 의장 입장에서라도 이 정도면 (표결)할 수 있겠다”고 결론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민주, ‘이재명 리스크’ 놓고 계파 이견 여전

“단일대요, 망하는 길” vs “분열하면 패배” 박용진 “지켜봐야”·박지원 “李대표 믿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놓고 당내 계파별 이견이 여전하다.

비명계는 “단일대요를 지키는 게 당이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친명계는 “총선을 앞두고 분열되는 것은 도둑이 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거나 대표 주변에서 범죄를 했다면 단일대요를 지키는 게 민주당이 망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죄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알겠는가”라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도 모른다”며 당이 나서서 ‘정진상의 무죄를 믿는다’고 (밝히는 등) 이렇게 당이 동원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 문제를 조사하는 검찰도 못 밝히고 있는 수

준이라고 한다면 아직 지켜볼 상황”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당 분열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계속됐다.

원조 친명계 그룹 ‘7인회’ 멤버인 김남국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공소장을 보면 (이 대표와) 공모 관계 자체를 적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출석하라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른 목소리는 항상 있었다”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분열하면 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野 단독 수정 예산안 ‘2조원 감액’

“초부자감세” 부결 시 늘어난 세수로 채무상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마련한 자체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남짓 감액한 규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는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감액분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꼭 삭감하겠다고 한 부문의 감액분을 더한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서민 감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마련한 안에 수정을 지시한 만큼 이 감액 규모는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부에 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안 초안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산출한 총 감액 규모는 1조7천억~2조원이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 총지출(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적용해 총 최대 7조7천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사업, 서민 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예산’에 들어갈 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반

영하지 않고 반드시 깎아야 하는 예산안 감액분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삭감액 중 조금이라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예산 등은 제외한 부분이 8천억원”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예산, 불필요한 예비비 등도 1조원 안팎으로 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초부자감세’ 기조가 담긴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고 당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두 안의 차액만큼 세수가 늘게 된다.

이렇게 남은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채무 상환에 쓰도록 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수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시한으로 박은 15일에 앞서 추가로 수정될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고향사랑e음’ 시스템 운영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12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를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 공제를 받

고, 해당 지역 특산물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식이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김진수기자

조오섭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12일 보험사기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

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